

국토부, 12·29 참사 ‘로컬라이저’ 정보공개 단 1건

김문수 “세부 항목 15건 중 14건 비공개”

“정보공개, 재발 방지 대책 위한 출발점”

‘12·29 제주항공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

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협의회 등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2025년 10월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 단 1건에 그쳤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

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참사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 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 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다.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

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 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열린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철현 “행정통합 찬성…주민투표로 완성을”

“적극 찬성…유불리 따지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민주권의 실현인 주민투표로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적극 찬성하며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 온몸을 던질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시·도지사과 국회의원, 도의원은 지역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일 뿐이고, 통합 결정의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라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합쳐진 ‘3려’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두 차례의 정부 주도 통합 시도는 실패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일궈낸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통합’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과 남해안 거점 도시로



의 도약이라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광주·전남 역시 통합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에 따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속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며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열어가는 국민주권 시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 혁명의 모범 사례이자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공 사례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李대통령 “중국發 부정선거, 정신 나간 소리”

“협중·협한, 양국에 큰 피해…韓中 동요”

靑 “시진핑, 서해구조물 문제 충분 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슨 부정 선거를 중국이 어찌고 저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느냐.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회견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협중 조장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협중·협한 정서’와 관련해 “협중·협한 정서라는 게 양국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큰 피해를 줬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저와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협중·협한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역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보완 설명드린다”며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

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확인 결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경주에서나 이번 베이징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화를 나눴고 시 주석도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다만 정상 간에는 통상 큰 틀에서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 주석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현재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건설적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한 바, 협의가 잘 이뤄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신정훈 ‘기본사회기본법’ 대표발의

李대통령 국정 비전 기본사회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점검·평가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정훈 의원은 “기본사회 기본법은 개별 복지 제도를 조금씩 손보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국정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이자 지휘본부’를 만드는 법”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본사회 비전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를번호
220603-중-139779